



NORTH KOREAN HUMAN RIGHTS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NORTH KOREAN HUMAN RIGHTS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김수암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
최진욱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이금순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CONTENTS

NORTH KOREAN HUMAN RIGHTS

제2권 2호 2007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인 쇄 2008년 2월

발 행 2008년 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인권연구센터

등 록 제2-2361호(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8

(팩시밀리) 901-254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디자인·인쇄 천세 2272-2727

<비매품>



| 국제사회 동향

1. 개별국가	3
2. 유엔	7
3. NGO	9
4. 분석 및 평가	13



| 북한의 대응

1. 미국에 대한 반응	17
2. 일본에 대한 반응	20
3. 남한에 대한 반응	23
4. 분석 및 평가	24



| 인도주의 사안

1. 탈북자	29
2. 납북자·국군포로	38
3. 이산가족	44
4. 기타	46
5. 분석 및 평가	47



국제사회 동향



1. 개별국가	3
2. 유엔	7
3. NGO	9
4. 분석 및 평가	13

1. 개별국가

가. 미국

톰 랜토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 손정남 구명 서한 발송

- 미국의 소리 방송 보도(7.17)에 따르면 톰 랜토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기독교 선교사를 도왔다는 이유로 공개처형 당할 위기에 처한 탈북자 손정남씨 구명을 호소하는 서한을 김정일 위원장 앞으로 발송함.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 미국의 소리방송과 인터뷰(7.27)

-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는 미국의 소리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핵문제 해결은 국제 안보차원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함.
 - 북미관계 정상화로 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인권 문제가 반드시 향후 협상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제기구의 정치범수용소 방문과 종교의 자유문제,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이 군대로 전용된다는 의혹 등의 문제가 분명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 자유아시아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8.16)

-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는 자유아시아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남북정상 회담 의제와 관련, 안보문제가 중요하지만 경제와 인권도 똑같이 중요한 의제로서 한국 정부가 인권문제를 의제로 상정하기를 희망한다고 표명함.
 - 북한 수해와 관련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

부시 대통령, 북한인권 언급(9.7)

- 부시 대통령은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일정의 하나로 열린 '재계 정상회의' 연설에 앞서 배포한 연설문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언급함.

- “우리는 북한주민들이 주변 민주국가들의 국민들과 같은 자유를 향유하는 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미 하원, 탈북자 복송 중단 촉구 대중 결의안 채택(10.23)

-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중국 정부에 대해 탈북자들의 강제 복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탈북자들의 인권 존중을 촉구하는 탈북자 결의안을 상정, 만장일치로 통과됨.
 - 중국정부가 1951년 체결된 난민지위에 관한 유엔협약에 규정된 의무와 1967년 의정서를 준수, 탈북자들의 강제 복송 중단 촉구
 - 탈북자들을 경제적 불법이민자로 자동 분류하지 말고 망명을 요구할 수 있는 합당한 기회 제공 필요
 -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탈북자 접근 허용 촉구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CRS),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 발표

- 미 의회조사국은 의회에 ‘재중 탈북자와 북한인권문제: 국제사회의 반응과 미국의 정책선택’ 보고서를 발표함.
 -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한 뒤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부시 행정부의 희망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동북아 다자안보기구 설립, 대북경제지원 계획 등으로 더 구체화되고 있지만 인권문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
 - 미국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요구하는 법안을 미 의회가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
 -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주의를 더욱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미얀마 자유와 민주화법’을 모델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 이외에 미 의회가 추가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
 - 미 의회가 지난 2003년 미얀마의 민주화와 인권개선을 위해 제정했던 ‘미얀마 자유와 민주화법’을 예로 들며 북한과 미얀마의 정치적 상황이 매우 다르지만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새로운 입법의 아주 유용한 모델이 될 것

이라고 표명

- * ‘미얀마 자유와 민주화법’은 미얀마 군사정권이 인권침해를 중지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에게 실질적으로 정권을 이양할 때까지 미얀마 모든 물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
-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미얀마의 인권유린을 이유로 지난 1992년 이후 미얀마주재 미국대사를 인준하지 않은 사실을 거론, 미 행정부가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더라도 북한 정권이 북한 인권을 개선하지 않으면 평양주재 북한 대사 인준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주장

크리스천 휘턴 국무부 북한인권담당 부특사, 북한인권법 언급(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 11.12)

- 크리스천 휘턴 부특사는 홍콩대학에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인권 개선, 탈북자 지원 등에 2천 4백만 달러를 책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미 의회의 예산집행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고 언급함.
 - 2006년 유엔 및 구호기관을 통한 대북지원과 대북 라디오 방송 확대를 위해 약 4백만 달러를 집행하였으나 북한인권법에 따른 예산은 아니었다고 표명

손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 북한인권 문제 언급(11.7)

- 북한인권문제는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북한 측에도 일관되게 제기해 온 아주 중요한 의제라고 언급함.

부시 대통령, 인권의 날 성명(12.10)

- 부시 대통령은 인권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을 비롯한 10여개 국가에서는 종교와 언론, 집회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인권상황에 대해 비판함.
 - 미국은 민주주의를 건설하고 자유의 축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과 계속 함께 할 것이라며 “북한, 이란 같은 나라의 국민들도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 날이 올 것”이라고 표명

나. 한국

북한자유이주민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총회 개최(8.29)

- 36개국 111명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은 서울 신라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탈북자의 국제법상 난민 지위 부여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채택함.
 -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납북자 및 북한자유이주민 인권문제를 2차 남북정상 회담과 6자회담, 북미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촉구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북한인권 문제 언급(8.9)

-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상회담에서 납북자 송환과 북한 인권 개선 문제 등에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 북한인권 논의(9.10)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 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의제로 채택하도록 권고하는 안건을 채택하여 찬반 논의를 진행함.
 - 표결 결과 참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공식 의제로 채택되지 못하고 기각

다. 기타 국가

북한인권 국제대회 개최(9.17~18)

- 태국에서 개최된 북한인권국제대회에서 크리스천 휘턴 미 국무부 북한인권담당 부특사는 미국은 북한 내 인권확장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한 국제적 공조 그리고 탈북자들에 대한 도움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것이라고 표명함.
 - 태국 수용소 내 탈북자의 실태와 이들의 미국행 수속 등에 관해 광범위한 면담과 조사활동 수행
 - 비릿 문타본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인권에 대해 보고

북한인권주간을 위한 행사 개최(12.10~16)

- 일본정부는 지난해 채택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북한 인권침해 문제 계발주간’으로 지정하고, 전국적으로 대규모 북한인권 행사를 개최함.
 - 북한인권과 관련한 탈북자 단체, 납치자 지원단체 등은 도쿄 등 각 도시에 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 개최
 - 국제회의에서는 일본과 태국, 한국, 루마니아 등의 피해자 가족들이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가족연합(가칭)’ 결성 제안
 - ‘국제가족연합’은 미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반대하는 활동을 연대해서 펼치고, 일본 뿐 아니라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전원의 구출을 목표로 설정

2. 유엔

북한 대표,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인권특별보고관 유지 비판(9.14)

- 6월 유엔인권이사회 제5차 회의에서 미얀마와 북한 2개국에 대해서만 국별인 권특별보고관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주제네바 북한대표부의 최명남 참사는 가장 차별적이고 불공정 하며 선택적인 행위로서 인권이 정치화되었다고 비판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총회에 보고서 제출

- 비릿 문타본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제62차 유엔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함.
 -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이 진전을 보이면서 북한 인권을 개선하 기 위한 분위기는 전보다 나아졌다고 평가
 - 8월 대규모 수해 이후 유엔 측의 접근을 허용하는 등 유엔기구들과 잘 협 조하고 있다고 평가
 -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지,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지, 탈북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고 있는지, 노약자 같은 힘없는 집단이 보호받고 있는지, 정부가 인권보호를 위해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북

- 한주민들은 아직도 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
- 정치범수용소 개혁과 함께 인간에 대한 폭력 제거는 물론 유괴, 실종에 대한 실효적 처리, 법 절차와 법에 의한 지배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
 -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의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11.20)

-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유럽연합과 일본이 제출한 대북인권결의안이 채택됨.
 - 찬성 97, 반대 23, 기권 60(한국정부 기권)
 - 영아살해나 탈북자 처벌 등 증거가 부족한 내용이 제외되었으나 2006년과 기본내용은 거의 동일
 -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를 인정하지 않는 점 우려
 - 북한에서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위반이 자행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잇따르는 점 우려
 - 홍수에 대한 북한정부의 즉각적인 반응과 외부지원을 구하는 데에 있어 북한이 보여준 북한의 개방사례 주시
 - 북한정부에 대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 존중을 강력하게 촉구
 -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유엔인권메커니즘에 협력 제공,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인권분야 기술협력, 유엔기관과 인도주의 행위자들에게 접근 제공 등 촉구
 -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 6자회담의 진전 환영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 포함
 - 박덕훈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 인권결의안이 잘못된 정보를 기초로 만들어진 것이며 문제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결의안이 주권국가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표명

북한외무성 대변인, 유엔총회 결의안에 대해 비난(11.22)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비난함.
 - “우리는 위선자들이 꾸며낸 인권결의를 전면 배격하고 거기에 담겨진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강력히 단죄한다”고 표명

-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일본과 유럽연합이 야합해 또 다시 꾸며낸 인권결의는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악선전 문서라고 규정
- 표결결과는 이 결의 채택에 찬성하지 않은 나라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것은 결의의 정치적 목적이 객관적으로도 문제시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
- 현 시기 최대의 인권유린은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깔고 앉아 피바다로 만드는 살육행위로, 최대의 인권유린국은 그러한 전쟁을 일으킨 나라와 그에 추종한 나라들이라고 비난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탈북자 조사 몽골 방문(12.15~21)

- 문타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몽골 수도 울란바타르를 비롯한 몽골 지역들을 방문하여 탈북자 실태를 조사함.
 - 몽골에 있는 탈북자 임시 보호시설들이 탈북자들에게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하고 더 나은 환기 시설을 갖추는 등 종전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고 표명
 - 2007년 몽골에 들어온 탈북자들은 200~300명에 이르고 있고, 이들은 남한에서 재정착하는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다양한 시설들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

3. NGO

좋은벗들, 북한 아사자 발생 주장

- 좋은벗들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7.26)에서 6월말부터 아사자가 발생하기 시작해 함흥시에서는 한달 새 기아로 인한 사망자가 300명을 넘어서는 등 함경남북도를 중심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표명함.

23개 북한인권 관련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8.28)

-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회, 북한구원운동,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자유방송 등 23개 단체들은 서울 태평로 뉴국제호텔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많은 북

한주민들이 정치범수용소에서 고통 받고 기아로 탈북하여 해매고 있는 상황
이므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문제를 반드시 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함.

- 불법적 공개처형 중단, 정치범수용소 해체, 탈북송환자에 대한 고문처벌
중단, 전쟁포로 및 납북자 즉시 송환, 기초적 신앙의 자유 보장 등 5대 의
제 설정 촉구

뉴스위크 인터넷판, 북한 지하교회 실상보도(9.9)

- 뉴스위크는 인터넷판을 통해 북한의 기독교인은 약 1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들은 성경책을 비닐로 감싸 뒷마당에 묻어 놓거나 일부는 중국에 있는 선교사
와 휴대전화를 통해 예배도 한다고 보도함.
 - 북한에는 개신 교회가 2개 존재하지만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은 정치체제
에 항거하는 반역으로 간주한다고 강조
 - 지하교회 교인들은 투옥되고 고문당하여 살해되고 있다고 주장

북한인권 정상회담 의제 채택 10만 서명 운동 전개(9.10~9.14)

-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등 10여개 대북인권 대학생단
체들은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문제와 납북자 및 국군포로의 귀환
을 의제로 상정할 것으로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함.

‘북한인권과 자유평화를 위한 국내외 70인 목회자회’ 기자회견(9.27)

- 이철신(영락교회), 이수영(새문안교회) 목사 등 국내외 목회자 70여명은 서울
저동 영락교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향한 70인 목회자 양심
선언서를 채택함.
 - 북한 지도자들은 기독교를 탄압하고 선교의 자유를 전면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내 지하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 중지 촉구

정치범수용소 출생 탈북자, 수기집 출판기념회(10.23)

- 북한 평안남도 개천시 14호 정치범수용소에서 태어나 정치범수용소 출생자로

최초로 탈북에 성공해 한국에 정착한 신동혁씨가 수기집 ‘북한 정치범수용소 완전통제구역: 세상밖으로 나오다’를 출간함.

- 공개처형과 인권침해의 실상, 수용소 내의 학교 생활과 작업반 생활, 결혼과 출산 등 내부 생활 증언

북한인권단체연합회 창립(11.13)

- 북한인권을 위해 개별적으로 활동해왔던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등 40여개 단체들이 북한인권단체연합회 창립 총회를 개최함.
 - 12월에 개최될 남북총리회담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좋은벗들, 북한인권보고서 발표(11.26)

- 좋은벗들은 ‘2006~2007년 북한사회 변화와 인권’이라는 제목의 북한인권보고서를 발표함.
 - 좋은벗들 북한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오늘의 북한소식」에서 수집된 자료를 1차적으로 활용하여 작성
 - 공개처형이 당의 지시를 어긴 사람을 단죄하고 국가의 방침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대주민 선전용으로 여전히 이용되고 있다고 강조
 - 비사회주의적 생활방식, 부정축재, 밀수, 휴대전화 사용, 불법 월경, 인신매매, 국가기물 무단 판매, 마약, 한국영상CD, 컴퓨터 게임 등에 대해 국가통제 강화

미 북한인권위원회,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 발표(11.28)

- 미 북한인권위원회(HRNC)와 뉴욕의 대형법률회사인 스캐든 압스 슬레이트 미거 앤드 플롬(Skadden, Arps, Slade Meagher & Flom LLP)은 ‘북한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방안(Legal Strategies for Protect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함.
 - 시민단체들이 국제형사재판소뿐만 아니라 미국법원에 김정일 정권의 반인륜적 범죄를 기소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
 - 각종 국제인권협약을 활용한 북한인권문제 제기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법적 수단으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유엔헌장상의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 미국의 「외국인 불법행위청구법(Aliens Tort Claims Act)」을 통해 미국 내 북한 자산을 동결하는 방안 등 제시
- 다만 안보리를 동원하는 방안은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포함된다는 점, 그리고 외국인 불법행위청구법을 통한 제소는 관련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린다는 점이 주된 걸림돌로 지적

자유북한방송, 방송시간 확대(12.3)

- 12월 3일부터 대북방송인 자유북한방송이 방송시간을 기존의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함.
 - 오전 1시간, 오후 2시간

북한인권관련 단체, 정책간담회 개최(12.5)

-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납북자가족모임, 북한민주화위원회 등 13개 탈북자 및 납북자, 북한인권 관련 단체 대표들은 차기정부 대북인권정책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함.
 - 정부 내에 북한인권 개선을 담당하는 창구를 설치하고 민관협의체 구성 주장
 - 북한인권법 제정, 대국민 홍보·교육방안 마련, 민관 공동주최의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 북한인권 개선 한국형 '헬싱키 프로세스' 추진, 국군포로 및 납북자와 이산가족 문제 분리 해결, 탈북자 인권보호, 정치범수용소 실태파악 및 대책 마련, 대북 민간방송에 대한 지원·역할 확대 등 집행과제 제시

북한개혁방송 개국(12.24)

- 탈북자 출신의 김승철씨는 단파·인터넷 라디오방송국인 '북한개혁방송'을 개국함.
 - 북한 간부와 엘리트, 청년층을 대상으로 북한 개혁·개방의 당위성과 방법 등을 소재로 한 보도물 방송
 - 개혁·개방에 나설 수 있는 세력이 북한 내에 자생토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4. 분석 및 평가

북한인권법에 따른 실효성 논쟁 및 추가 입법 논의

- 미국 내에서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예산이 책정되지 않는 등 북한인권법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크리스천 휘턴 부특사는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2천 4백만 달러를 책정할 수 있으나 미 의회의 예산집행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고 언급
- 미 의회조사국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주의를 더욱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미안마 자유와 민주화법’을 모델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 이외에 미 의회가 추가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북미관계정상화와 북한인권 개선 연계 강조

-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는 북미관계 정상화로 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인권문제가 반드시 향후 협상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제기구의 정치범수용소 방문과 종교의 자유문제,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이 군대로 전용된다는 의혹 등의 문제가 분명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

인권침해에 대한 유엔의 개입 촉구 지속

- 지난 해에 이어 유엔안보리, 국제형사재판소 등이 북한인권문제에 개입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미 북한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법적 수단으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 미국의 외국인 불법행위청구법을 통해 미국 내 북한 자산을 동결하는 방안 제시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 의제화 공론화 확대

- 2007년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총리회담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의제화하도록 촉구하는 주장들이 강하게 제기되었음.
 -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는 안보문제 못지 않게 인권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한국 정부가 인권문제를 의제로 상정하기를 희망한다고 표명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 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의제로 채택하도록 권고하는 안건을 채택하여 찬반 논의를 진행함.
- 23개 국내민간단체들은 공동으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함.
 - 10여개 북한인권 대학생단체들은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문제와 납북자 및 국군포로의 귀환을 의제로 상정할 것으로 요구하는 서명운동 전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대북방송 활동 강화

-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대북방송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었음.
 - 크리스천 휘턴 부특사는 2006년 유엔 및 구호기관을 통한 대북지원과 대북 라디오 방송 확대를 위해 약 4백만 달러를 집행하였다고 표명
- 개혁·개방에 나설 수 있는 세력이 북한 내에 자생토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파·인터넷 라디오방송국인 ‘북한개혁방송’이 개국됨.
 - 자유북한방송 방송시간을 기존의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연대 활동 강화

- 36개국 111명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됨.
- 일본정부는 지난해 채택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북한인권침해 문제 계발주간’으로 지정하고, 전국적으로 대규모 북한인권 행사를 개최함.
 -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태국에서 북한인권 국제대회 개최

북한의 대응



- | | |
|--------------|----|
| 1. 미국에 대한 반응 | 17 |
| 2. 일본에 대한 반응 | 20 |
| 3. 남한에 대한 반응 | 23 |
| 4. 분석 및 평가 | 24 |

1. 미국에 대한 반응

미국 국내 인권 거론

- 북한은 미국의 국내 인권문제를 거론함으로써 미국이 북한 등 다른 나라의 인권을 거론할 자격이 없음을 강조함.
- 9월 15일자 『민주조선』은 ‘날날이 드러난 인권유린 왕초의 추악한 정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국은 9.11테러 이후 불법도청이 만연하고 거리감시를 위한 비디오카메라 망을 구입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지방정부에 지원하였다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 감시속에 있는 미국사회에서 진정한 인권이란 있을 수 없다”고 비난함.
- 10월 11일자 『민주조선』은 9월 20일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한도시에서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흑인들의 시위를 보도하며, “지난해 말에도 미국 뉴욕시의 중심구역에서경찰들의 무차별적인 사격으로 무방비 상태의 죄없는 흑인들이 죽거나 치명상을 입은 끔찍한 참사가 빚어졌었다”고 보도함.
- 10월 21일자 『로동신문』은 “미국은 자유, 인권 평등을 남달리 요란하게 부르짖는 나라이나, 실제로 미국은 자유, 인권, 평등의 불모지, 폐허지”라고 주장하면서 ‘비인간적이며 불공정한 사회의 희생자들’의 예를 들었음.
 - 예컨대, 미국여성정치연구소의 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여성들의 평균임금이 남성들의 76.2%에 불과하며 루이지애나주에서는 흑인여성들이 백인남성들의 절반도 못되는 임금에 매달려 고달프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

미국의 해외 인권침해 지적

- 북한은 해외에서 미국의 인권침해 사례를 지적하며 미국이 인권수호국가가 아닌 인권침해 국가임을 강조함.
- 9월 11일자 『민주조선』은 ‘인권옹호국의 진면목’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라크내에서 미국의 ‘반인권적 행위’를 규탄함.

- “2003년 이라크전쟁이 개시될 당시 미국은 이라크인들에게 <인권>, <민주주의>를 보장해주고 <번영>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달콤한 <약속>을 하였다. (중략)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국이 이나라에 가져다준 것이란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 무시무시한 죽음과 파괴, 고통뿐이었다.”
- 8월 27일 미군의 무차별적인 폭격과 총격으로 하여 30여명의 무고한 이라크인들이 사망한 것과, 그 이전 미공군이 사마라의 가정집에 폭격을 하여 일가족 7명이 즉사한 사건을 거론

미국내 인권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인용

- 북한은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인권침해국으로 비판받고 있음을 강조함.
- 10월 11일자 『로동신문』은 유엔총회 62차 회의에서 미국이 주제넘게 ‘인권재판관’ 행세를 하다가 동네북 신세가 되었다고 보도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인권탄압에 대한 비판이 만연하다는 것을 부각함.
 - “잠바브웨 대통령은 ‘부쉬의 손은 많은 나라의 무고한 인민들의 피에 푹 젖어있다. 그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살육을 감행하고 있다. 그래 이런 사람이 인권문제에서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였다고 함. 그는 자기 나라의 인권문제를 걸고든 미국집권자의 연설을 녀두에 두고 ‘정말이지 터무니 없는 위선행위이다’라고 규탄하면서 분노를 표시하였다”고 보도
 - “유엔본부에서 배포된 공보에서 꾸바는 이라크에서 6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살해되고 관타나모 미해군기지 감옥에서 수감자들이 고문당한 책임이 미국집권자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다고 보도함. ‘부쉬는 범죄자이며 그에게는 그 어떤 다른 나라에 대해 시비질할 도덕성도 신뢰성도 없다’라고 공보는 지적함.”
 - “니까라과 대통령은 꾸바에 대한 미국의 봉쇄를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보도함. 그는 피델 가스프로 꾸바국가 리사회 위원장 암살을 지시한 제도를 대표하는 부쉬가 꾸바의 ‘인권문제’에 대해 시비질하는 것은 ‘전적으로 무례한 행위’라고 말함.”

미국의 대북 인권 거론 부당성 지적

- 북한은 미국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인권 자체 보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함.
- 8월 30일자 『로동신문』은 인권문제에서 이중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철저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함.
 - “인권분야에서 이중기준 적용은 본질에 있어서 인간의 자주적 존엄과 권리를 무시하고 특정한 <가치관>에 기초한 세계의 <일체화>를 주장하는 그릇된 사상관점과 태도의 발로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권리를 짓밟고세계를 지배통제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강권행사이다.”
 - “인권분야에서 미국의 이중기준 적용은 나라들 사이의 대립과 분쟁을 조장시키고 국제평화질서를 파괴하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고 있다.”
- 8월 17일자 『로동신문』은 ‘제국주의의 <인권> 공세를 단호히 짓부시자’는 제하의 정론을 통해 미국의 인권공세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음.
 - “제국주의의 인권 공세는 세계제패 전략의 중요한 수단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악랄하고 교활한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있다. 여기에서 그들이 가장 큰 힘을 넣고 있는 것이 인권공세이다. (중략) 그 누구도 인권문제를 자기의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고 오도하지 말아야 한다. 인류의 한결같은 지향과 염원을 짓밟고 인권문제를 다른 나라의 사회정치제도를 와해, 붕괴시키기 위한 공간으로 써먹는 제국주의자들이야말로 평화와 인권의 첫째가는 원수이다.”
- 9월 13일자 『로동신문』은 논평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이 인권문제를 정치화해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인권 공세’ 대상국을 선별하고 있다며 ‘미국의 인권공세는 세계를 미국화·서방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비난함.
 - 9월 11일자 『평양방송』도 미국의 반테러전을 비난하면서 미국을 ‘인권유린의 주범’이라고 공격했고 10일엔 ‘세계 모든 나라에 똑같이 맞는 유일한 인권기준이란 있을 수 없다’고 반박
- 박의춘 외무상은 9월 4일 이란 테헤란에서 열린 ‘인권 및 문화다양성’에 관한

비동맹운동(NAM) 장관급 회의 연설에서 “인권옹호를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하고 타민족의 운명을 농락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함.

- 9월 5일에는 국가안전보위부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정보기관의 간첩활동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는 자리에서 “오늘 적대세력들이 각종 모략단체와 비정부기구들까지 발동을 해서 인권분주탕을 피우고 있다”며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행위이고, 제도전복을 위한 도구이고, 침략전쟁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임.
- 조선외무성 대변인은 11월 20일 유엔총회 62차 회의 3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된 대북 인권결의를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악선전문서”라고 비난하며 배격함.
 - 일본과 유럽연합이 야합하여 조선의 인권실태를 비난하는 결의를 꾸며낸 것이라고 주장

2. 일본에 대한 반응

총련탄압 규탄

- 북한은 총련이 부실채권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중앙·지방본부 소유의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들이 대부분 압류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과 관련 일본정부를 강력히 비난하고 있음.
 - “재일조선인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의 옹호자인 총련의 활동거점을 물리적으로 제거하여 총련과 재일조선인 활동을 말살하려는 책동으로서 역대 일본의 어느 정권도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한 우리공화국에 대한 흉악한 주권침해행위이다.”(『로동신문』 7.1)
 - “아베는 일본사회에 대조선적대의식을 고취하여 수상자리에 들어앉은 이래 반공화국, 반총련소동을 계단식으로 강화해왔다. (중략) 아베일당은 오늘에 와서는 정리회수기국을 내세워 총련중앙회관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까지 강행하려고 날뛰고 있다.”(『로동신문』 7.7)
- 일본반동들의 총련탄압 책동을 항의하는 군중집회가 평양(7.10), 원산(7.11)에서 개최됨.

- 7월 13일에는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교직원 학생집회가 개최됨
- 총련탄압의 부당성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음을 강조함.
 - 인디아 대외정책연구소 소장 제이 케이 파텔은 7월 6일 발표한 담화에서 일본당국의 총련탄압행위를 규탄한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
 -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와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가 7월 12일 일본의 총련탄압 행위를 규탄하여 공동성명을 발표
 - 7월 12일 ‘국제고려인 통일연합회’ 위원장 석명손이 총련탄압행위를 규탄
 - 7월 14일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지지 스위스위원회’가 총련탄압행위를 규탄
 - 7월 20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아협회’가 총련탄압을 규탄
- 9월 25일 유엔인권이사회 제6차 회의에서 북한 대표는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이 청산된 새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일본의 재일조선인 탄압에 대하여 규탄함.
 - “지금 일본에서 살고 있는 과거 식민지 조선의 후예들은 단지 조선사람이라는 이유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라는 이유로 탄압당하고 교육, 보건, 일자리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혹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 일본당국은 올해에만도 수십차례에 걸쳐 수백명의 중무장경찰과 장갑차를 동원하여 총련도쿄도본부와 지부사무소들, 재일조선인들의 집을 강제수색하고 폭행을 가하였으며 마구체포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이것도 성차지 않아 총련을 말살하려고 총련중앙본부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까지 하고 있다.”
- 유엔주재 박길연 대표는 7월 5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어, “재일조선인의 민족적 권리를 유린하는 일본당국의 책동이 가장 무모하고 악착한 단계에서 감행되고 있다”며 유엔과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킴.

식민시대 일제 만행 규탄

- 북한은 식민시대 일본의 조선인 강제연행에 대한 보상과 사죄를 거듭 요구함.

- “조선사람들을 집단적으로 강제연행, 납치, 유괴하여 노예노동을 강요하고 학살한 것은 일제시기 조선민족말살이 정책화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정부적인 명령, 지시가 없이는 할 수없는 범죄행위였다.”(『조선신보』 10.24)
- “일본군 <위안부>범죄는 구일본정부와 군의 직접적인 개입과 지휘밑에 조직적으로 감행된 20세기 최대의 반인륜적 범죄행위였으며 그를 입증한 수많은 자료들이 이미 발굴 공개되었거나 지금도 계속나오고 있다. (중략) 얼마전에는 일본의 우방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국회 하원에서까지 일본국과 군이 감행한 성노예행위를 반인륜적 범죄로 된다고 확인하고 현일본정부가 그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민주조선』 8.9)
- 11월 3일 야마구치에서 개최된 ‘2007 재일조선인역사·인권주간 전국집회’에 약 170명이 참가한 가운데 1905년 조약, 강제연행희생자의 유골문제, 인종차별철폐조약에서 본 재일조선인에 대한 일본정부의 억압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일본인 납치에 대한 역공

- 북한은 일본인 납치문제는 이미 끝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식민시기 일제의 만행과 이후 일본에 의한 조선인 납치를 거론함으로써 ‘납치문제’를 희석시키고자 함.
- 『민주조선』 7월 10일자는 ‘납치는 일본의 타고난 기질인가?’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지난 6월 일본반동에 유괴·납치되어 심양주재 일본 총영사관을 통해 일본에 끌려가게 되었던 북한공민 도추지(여)가 돌아왔다고 선전함.
 - 일본은 2002년에도 안필화 여성을 유괴, 납치한 바 있는 등 일본의 납치는 조직적이라고 비판
 - 지난 세기 전반기 840만여 명의 조선 청장년들을 전쟁터와 죽음의 고역장으로, 20만 명의 조선여성들을 황군의 성노예로 끌여가는 만행을 저지른 일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치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조·일국교 관계를 절대로 정상화할 수 없다고 어거지를 부린다고 비난
- 7월 19일 외무성 비망록을 통해 납치문제는 2002년 9월 17일 북·일정상회담 시 13명이 납치피해자로 확인되었고 그중 5명이 살아있고 8명은 이미 사망하

였다는 조사결과가 일본에 통보되었고 공식유감이 표명된 데 이어, 생존자 5명과 그의 자녀 7명 모두가 일본으로 돌아가고 부모의 희망대로 요코다 메구미의 유골까지 일본에 돌아감으로써 종결되었다고 주장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납치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를 구실로 일본의 재무장을 다그치고 조일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을 막으며 6자회담을 파탄시켜 조선반도핵문제가 풀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함.
 - “일제의 조선강점기에 조선인납치, 강제연행, 살인죄악을 은폐, 무마시키려고 비열하게 책동하면서 이미 해결된 납치문제를 계속 들고 다니고 있다.”(『로동신문』 8.24)

3. 남한에 대한 반응

보안법 철폐 주장

- 남한내 인권문제 거론의 핵심으로 보안법 철폐주장이 지속되었음.
 - 『민주조선』 8월 4일자는 7월 23일 서울 여의도의 국회회관에서 <보안법 피해자 가족문화제>가 개최되었다는 것을 보도하였음. “참가자들은 시와 노래들을 통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유린하는 보안법은 당장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로동신문』 9월 3일자는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관계자들을 단속하는 것과 관련 한나라당과 보안법을 비난함. “반통일세력들은 15기 한총련이 출범하기도 전에 벌써 <리적단체>로 규정하고 년초부터 관련자들에게 출두요구서를 발급하는 등 위협을 가하며 탄압의 도수를 더욱 높여왔다. (중략) 지금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반통일세력들의 한총련 말살책동을 분쇄하기 위해 청년학생들의 정당한 애국활동을 적극 지지성원하면서 보안법철폐, 보안수사대 해체, 한총련 리적 규정철폐를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고 있다.”
 - 『민주조선』 12월 6일자는 11월 2일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보안법> 피해자들의 증언대회가 열려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였다고 보도
 - 12월 7일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이 보안법으로 구속되었다고 보도

아프가니스탄 인질사건

- 『민주조선』 8월 24일자는 ‘남조선 민간인 납치사건과 그 교훈’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 납치사건에 대하여 “미국에 대한 추종이 어떤 재난을 빚어내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비난함.
 - 탈레반의 인질석방조건은 “남조선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라는 것이었다”고 전하면서 “남조선이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한 미국의 공범이기 때문에 남조선민간인들을 납치했다는 것이 탈레반의 주장이다”라고 보도

4. 분석 및 평가

-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거론에 대하여 사실왜곡이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미국과 일본, 한국내의 인권문제를 거론함으로써 역공을 전개함.
 - 국제사회의 인권거론은 이중적 기준에 의한 자의적인 것이며, 미국, 일본, 한국 등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강조
- 미국은 국내외적으로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국가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함.
 - 국내적으로 흑인과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하고 있으며,
 - 해외에서는 이라크 등에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함
- 미국의 국제적 인권침해에 대하여는 국제사회가 비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주장을 합리화 함.
- 특히, 미국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북한체제를 흠집내고 전복시키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난함.
- 일본에 대하여는 일제시기 조선인 강제연행과 위안부 문제를 집중 거론함으로써 일본의 부도덕성을 집중 부각시키고자 함.
- 일본인 납치문제는 다 해결된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일본은 ‘납치문제’를 거론할 자격도 없고 납치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일본의 재무장과 6자회담을 파

탄시킴을 위한 정치적 의도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총련과 관련해서는 총련 본부와 지부의 경매조치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였고,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남북한 협력을 촉구하기도 함.
 - 재일동포 등 해외동포의 권익 옹호에 대한 한계를 인정함
- 남한에 대하여는 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한편, 아프가니스탄 인질사건이 친미정책의 결과라고 비판함.



인도주의 사안



1. 탈북자	29
2. 납북자·국군포로	38
3. 이산가족	44
4. 기타	46
5. 분석 및 평가	47

1. 탈북자

북한이탈주민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7.6)

- 국정원은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이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발표함.
 - 이모(30)씨는 2003년 어머니, 누나와 두만강을 건너 탈북, 중국과 몽골을 거쳐 국내 입국
 - 사회적응교육을 거쳐 2004년 2월 지역정착(정착금 3,000만원, 영구임대 12평 지원)
 - 2004년 6월 북한누나(43)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의 북한여행증명서를 구입하도록 부탁한 후 10월 관광 비자를 소지하고 중국으로 출국
 - 10월 두만강을 건너 북한에 입국하여 보위부관리에게 뇌물을 제공(북한 돈 6만원 상당의 담배, 8만원 상당의 일제중고자전거, 현금 12만원)하고 처벌을 피함
 - 재 탈북하여 2005년 6월 국내 재입국
 - 2005년 12월 동일한 경로로 다시 밀입북 해 가족들과 생활 후, 2006년 9월 아들(6)과 이웃 최모(여성)와 탈북 11월 재입국 후 동반탈북자들의 입국 조사과정에서 발각됨.

탈북자 추정 일가족 4명 베트남 하노이주재 덴마크 대사관 진입(7.11)

- 어른 2명, 어린이 2명으로 한국망명 요청하여, 한국대사관이 덴마크 대사관과 접촉 신병처리에 관한 의견을 교환함.
 - 베트남 외교부는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해결, 한국 입국(7.31)

광주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조례안 의결(7.13)

- 광주광역시의회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조례안’을 의원입법 발의(7.3)하여 본회의 의결함.
 - 정착을 돕기 위한 시책마련, 예산지원, 기구 설치 포함

- 임기 2년인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는 민간협력과장, 사회복지과장 등 시 공무원과 외부지원업무 전문 인사 등 15인 이내로 구성

미 난민·이민위원회(USCRI) 탈북자 실태보고(7.13)

- 미 난민·이민위원회(USCRI)는 중국 내 탈북자가 2006년 말 현재 3만명, 강제송환 탈북자 1,800명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함.
 - 각국 정부와 유엔, 비정부기구 등의 자료를 토대로 탈북자를 비롯한 ‘2007년 국제 난민조사’ 보고서를 발간
 - 지난 해 보고서의 탈북자 5만 여명, 강제송환 탈북자 5,000명에 비해 크게 감소

중국 일부 지방정부 현지체류 탈북자에게 신분증 발급(7.16)

- 연합뉴스는 중국 일부 지방정부가 현지체류 탈북자에게 제한적이거나 신분증을 발급해 주는 등 중국의 탈북자 정책이 다소 변화하고 있다고 보도함.
 - 중국 당국자는 15일 ‘중국이 일부지역에서 중국 남성과 결혼한 탈북 여성 위주로 중국공민신분증을 발급’하며, 이는 적발 후 북송이라는 강경일변도 정책의 변화라고 분석
 - 중국 “일부지방정부는 탈북자에 대한 신분증 발급 기준을 담은 조례까지 제정”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는 중앙정부의 묵인이나 지침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설명
 - 이러한 조치는 동북3성보다는 내륙 쪽인 것으로 추정되며, 2004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시점은 미확인
 - 중국 내륙지역은 이농현상으로 결혼적령기 여성 부족으로, 중국정부가 탈북여성을 통해 지방사회 안정화 도모 노력으로 해석됨
 - 중국 정부의 탈북자에 대한 기본정책 변화로 해석하기에는 아직 무리라는 평가

‘북한자유를 위한 한인교회연합(KCC)’ 탈북자 구출 캠페인(7.17)

-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에 앞서 탈북자 구출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내 백성을 가계 하라’ 캠페인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

- 중국 내 탈북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를 미국 50개 주와 전 세계에 알려 중국이 모든 탈북자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해 올림픽 개최이전에 희망에 따라 제3국행을 허용할 것을 촉구
- KCC 부설기관으로 중국 내 30만 명의 탈북자 자유캠페인을 전개할 ‘여리고 회(Jericho Institute)’ 발족

탈북여성 고용 성매매업소 적발(7.24)

- 강원지방경찰청은 탈북여성 3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스포츠 마사지 업체 주인(46)을 불구속 입건함.
 - 탈북여성 3명은 재활을 위해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단체에 인계

‘아시아·태평양 인권협회’ 태국정부에 NGO의 탈북자 지원 보장 촉구(7.26)

- 미주 한인단체인 ‘아시아·태평양 인권협회’ 태국정부에게 NGO의 탈북자 지원 보장을 촉구함.
 - 유천중 대표 등 4명은 워싱턴 태국대사관을 방문, 태국 수용소 내 탈북자에 대한 의료 활동 및 물품지원 허용 촉구 성명 전달
 - 태국체류 탈북자들이 한국 및 미국 등 희망지역으로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태국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요구

남북자유 왕래 탈북자 구속 기소(7.27)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국내 정착 후 2차례에 걸쳐 북한을 드나든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로 이모(29)를 구속 기소함.
 - 2003년 9월 탈북 입국한 남성으로 2004년 10월~2005년 6월, 2005년 12월~2006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을 통해 북한에 입국하여 체류한 혐의
 - 아내와 자식이 북한에 거주하고 있으며, 북한을 드나들며 밀수입품을 파는 ‘되거래’ 장사

태국 이민국 수용소 내 탈북자 사망(8.9)

- 제3국 입국을 위해 대기중이던 김모(40대 후반) 뇌출혈로 병원으로 이송중 사망함.
 - 3개월 전부터 동서와 처제 등과 수용소생활을 하면서, 고혈압으로 고통을 호소했지만 수용소 규정이 의사의 진료와 처방전 없이 수용소 내 의약품 반입을 금하고 있어 치료를 받지 못함

탈북자 대북송금 증가(8.13)

- 광주 CBS ‘북한으로 유입되는 탈북자 지원금’을 연속 기획·보도함.
 - 한국, 중국, 북한현지의 브로커들이 관여되어 북한송금 가능
 - 상당수가 정기적으로 송금
 - 은밀한 송금과정에서 사기사건도 발생

태국 경찰, 골든트라이앵글지역에서 탈북자 7명 연행(8.14)

- 남성 1명, 여성 4명, 어린이 2명(6세, 7세) 등 7명 탈북자가 태국, 라오스, 미얀마 접경지대 90km 떨어진 태국 북부 치앙마이 주에 밀입국해 버스를 타고 경찰의 불심검문 단속 관계당국 조사를 받게 됨.

유럽지역 탈북자 행세 중국인 증가(8.20)

- 홍콩 상다오르바오는 유럽으로 밀입국한 중국인들 가운데 탈북자 행세를 하며 매달 수백유로 보조금을 챙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함.
 - 베이징에 집결, 단체여행객으로 위장, 태국 방콕으로 건너간 후 비자 없이 유럽에 갈 수 있는 말레이시아 여권 구입
 - 여권가격은 20만 위안(약2,400만원) 가량으로 네덜란드에 들어가 브로커에 의해 몇 개 나라로 배정, 탈북자로 위장하여 정치 난민 신청
 - 북한말을 못해도 독일 등 난민법에 탈북자가 북한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 무리가 없음.
 - 탈북 후 “중국에서 10년 넘게 살아 모국어를 잊었다”, “중국정부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송환 될게 두려워 유럽으로 도망쳤다”고 강조하면 통과 가능

- 정식 거류허가를 받기 전에 난민캠프에 살며 매달 정부로부터 345유로, 3개월마다 의류·보험료 명목의 200유로를 지급받고 아르바이트

탈북자 5명, 베트남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 진입(8.21)

- 남성 1명과 여성 4명이 하노이 소재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벽을 넘어 진입, 탈북자임을 밝히고 자유국가로 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베트남 법률과 국제규정에 따라 인도주의 차원에서 처리할 것으로 설명(8.23)

국내입국 탈북자 밀수혐의 불구속 입건(8.27)

- 송파경찰서는 허가받지 않은 국소마취 크림과 문신 시술기구 등을 중국 등지에서 몰래 들여와 판매한 혐의로 탈북자 유모(40)와 누나(48)를 불구속 입건함.
 - 1999년 입국하여 북한에 있는 쌍둥이 딸들을 데려오려고 희망
 - 국제택배를 이용, 물품을 밀수하여 인터넷에서 판매한 혐의

홍수 이후 탈북 주민 증가(8.28)

- 자유아시아 방송, 홍수 이후 탈북 주민 증가 보도(8.28)
 - 일본의 '북조선난민구원기금' 대표는 1998년부터 중국내 북중국경지역에 탈북자 쉼터 4곳에 한 달 평균 북한주민 15~20명이 도움을 요청했으나, 홍수이후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공개
 - 대부분 무산, 온성, 회령지역 출신이며, 청진, 김책, 함흥 등의 지역 출신도 도움을 요청하고 식량을 구해 북한으로 귀환

국제의원연맹 탈북자 문제 주요 대북회담 의제화 촉구(8.29)

- 36개국 111명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북한자유이주민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이 북한자유이주민 인권 및 납북자 문제를 2차 정상회담과 6자 회담, 북미회담의 주요 의제화 할 것을 촉구함.
 - 2008년 중국 베이징 올림픽이 북한자유이주민의 주요탈북경로이자 체류지

- 인 중국정부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평가
- 2003년 창립된 이래 각국 북한인권관련 법규제정과 북한자유이주민의 난민지위 획득 및 보호요청 노력

탈북자 지원 탈북자 중국 공안에 체포 보도(9.13)

- 자유북한방송 김성민대표는 탈북과정에서 아들을 여의고 탈북자 지원활동에 전념해 온 탈북자 유상준(45)이 다른 탈북자 9명과 중국공안에 체포되었다고 보도함.
- 8월 중순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에서 체포되어 한국대사관이 연고자에게 통보
- 미국 북한자유연대 등이 이메일을 보내 주미대사관에 대해 유상준 석방 및 북송금지 촉구활동 약속

동남아체류 탈북자 미국 망명 허용(9.19)

- 태국이 아닌 동남아국가 체류 탈북여성(20대 후반)의 미국 입국이 최초로 성사됨.
- 2002년 탈북, 강제송환 되었던 여성으로, 1년 전 재탈북 태국을 거쳐 동남아 제3국으로 이동
- 미 북한인권법에 의한 난민입국 31번째 사례

중국 내 탈북자 지원 재미교포 석방(9.25)

- 스티브 김(김성환)은 2003년 중국에서 탈북자들의 제3국 정착(한국)을 돕다가 '불법 외국인 수송' 혐의로 공안에 체포되어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년 앞당겨 석방됨.
- 미국 정부와 의회가 석방을 지속적으로 촉구

북송 재일교포 가족 집단 일본 입국 보도(10.1)

- 5년 전 탈북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교포 일가족 9명이 8월 초 일본에 입국한 것으로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함.

- 재일교포 2세로 1972년 북한으로 건너간 남성은 북한여성과 결혼, 2남 1녀를 두었으나, 빈곤을 견디지 못하고 탈북 중국에 체류하다가, 2001년 중국 국적을 취득한 후 2002년 일본으로 입국
- 부인과 아들 부부 4명, 딸 1명, 손자 3명이 가장의 주도로 4월 탈북한 후, 중국 선양 일본 영사관에서 보호를 받아오다 동시 입국
- 조선(북한)국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도쿄에 거주하면서 일본 북한 인권법에 따라 일본정부로부터 생계비 지원을 받음

탈북자 베이징 한국국제학교 진입 실패(10.9)

- 20대 초반의 남녀 4명이 베이징 한국국제학교 유치원생들의 하교시간에 학교로 진입하여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출동한 중국공안에 강제연행되었으며, 20대 초반 여성은 진입을 시도하다가 되돌아 감.
 - 진입소식을 접하고 영사부 직원들이 출동했으나, 중국 공안은 국제학교가 ‘한국땅이 아니라 중국 땅’이라며 이례적으로 현장접근을 저지함
 - 중국 공안의 한국 외교관에 대한 ‘물리력 행사(과잉행동)’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주한 중국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 전달 방침 결정(10.10)
 - 한중 양국 간 ‘영사 관계에 대한 빈 협약’을 근거(중국은 공안의 정당한 법집행을 한국 영사들이 방해: 영사의 주재국 법령 준수 의무, 한국은 중국공안이 외교관신분임을 밝힌 우리 영사들에게 물리력 행사: 외교관 신체의 불가침 권한)로 공방(10.12)

북한인권단체 외교부관계자 6명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 청구(10.18)

- 북한민주화위원회와 피랍탈북인권연대는 9월 12일 태국 탈북난민의 인권개선을 외교통상부에 요구했으나, 태국 이민국 수용소 내 탈북 난민에 대한 인권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외교통상부 장관과 태국 주재 대사 등 관계자 6명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구함.
 - 외교통상부는 “정부가 태국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감호시설 내 탈북자를 위한 생필품, 의약품 공급 및 전문 의료 서비스 제공 등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해명

벨기에 탈북자에 난민지위 부여(10.23)

- 자유아시아방송은 6월 벨기에 도착 난민지위를 신청한 김철수(가명)에 대해 두 번의 인터뷰를 거쳐 약 한달 전 난민지위를 부여했고, 22일 정식 체류허가증이 발급된 것으로 보도함.
 - 함경도 출신으로 2001년 탈북했으며, 중국에서 유럽으로 보내는 전문브로커의 권유로 벨기에를 선택했다고 주장
 - 난민지위를 부여받으면 직업을 갖기 전까지 매달 실업수당 625 유로 수령

러시아, 탈북자 망명신청 거부(11.18)

- 러시아당국은 강제송환 도중 탈출하여 망명신청한 탈북자 정금철의 망명을 거부하였음.
 - 40대로 10년 전 러시아 극동지역 오렌버그 건설노동자로 일하다 탈출, 시베리아출신 러시아 여인과 3살짜리 아들을 두고 있음.
 - 재심 청구로 강제출국의 위험은 없으며, 유엔난민기구가 제공하는 모스크바 안전가옥에 살면서 최종결정 전까지는 합법적인 취업 가능
 - 러시아 인권단체인 '시민지원'이 관여함.

탈북자 강제송환 중지 국제연대 시위(12.1)

-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에 항의하는 중국대사관 앞 시위가 미국 내 5개 중국영사관 앞, 11개국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림.
 - 북한 자유연대를 비롯 탈북자대책관련 단체회원들과 한국교민들이 참여

평양예술단 '탈북자 난민인정, 북송중단' 시위(12.6)

- 탈북자 출신으로 구성된 평양예술단(단장 마영애)이 워싱턴 주미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북송반대 시위
 - 중국 내 구금 탈북자 및 탈북 도우미들의 즉각 석방 촉구

탈북자 라오스 스웨덴 대사관 진입(12.7)

- 라오스 주재 스웨덴 대사관에 탈북 남성 2명이 진입하였으며, 대사관측은 탈

북자에게 대사관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고, 대사관 정문 앞엔 라오스 무장 경찰이 대기함.

영국 내 탈북자 난민신청 증가(12.10)

- 자유아시아방송은 남한에 정착했던 탈북자들이 신분을 제3국 체류 탈북자로 위장 영국에 난민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영국정부가 탈북자들의 입국·난민 심사를 강화할 방침.
 - 영국 의회도 '위장'난민신청사례를 조사할 예정
 - UNHCR에 따르면, 난민신청 탈북자가 2007년 1월부터 10월까지 245명에 달함.

중국 접경지역 탈북자 단속 강화(12.22)

-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접경지역에서 군병력을 동원 탈북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일본단체인 '북조선난민구호기금'에 따르면 중국 당국의 탈북자 단속활동은 전적으로 국경수비대가 맡아왔으나, 군병력이 대거 투입
 - 도문에서 삼합까지 20킬로미터 지역에 철조망 설치
 - 중국당국의 단속으로 북송위기에 처한 탈북여성이 후베이성 수용소에서 처지를 비관 자살

탈북자 중국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통해 미국 입국 성사(12.25)

-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에 따르면, 20대 남성과 30대 여성 등 탈북자 2명이 지난 해 북경주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보호를 받아 오다 중국 당국과 미국 측 승인을 얻어 미국 망명길에 오름.
 - 비공개로 1월 사례에 이어 두 번째 사례로,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당국이 국제사회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
 - 중국 정부는 위의 사례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는 않는다는 원칙을 정정하고 난민지위를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국제적 의혹을 전면부인

2. 납북자·국군포로

납북자 가족 11명 ‘공무집행방해’ 피소(8.8)

- 통일부는 납북피해자보상법 시행령에 대한 공청회(7.27)를 물리적으로 방해한 납북자 가족모임 관계자들을 공무집행 방해, 기물파손, 폭행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함.
 - 가족모임은 통일부의 조치에 항의, 21일부터 정상회담 개최(8.28)까지 청와대와 통일부, 통일부장관 자택 앞에서 연쇄 항의 시위
 - 가족모임은 통일부장관을 ‘일부 납북자들에 대해 월북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명예훼손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7.27)

납북자 단체들 제2차 정상회담에서 적극적인 해결 촉구(8.9)

- 납북자관련 3개 단체는 각기 정상회담에서 보다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함.
 - 납북자가족모임은 남북공동의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추진위원회’ 설치 제안, 납북자가 송환되면 북송을 희망하는 비전향 장기수의 북송도 다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납북자가족협의회는 납북자, 국군포로의 문제는 정상회담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정상회담에서 남북당국이 납북자 송환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를 희망
 -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전쟁당시 발생한 불행한 일의 해결없이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 논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생사 및 주소확인, 사망시 유해소재지 통보 등 촉구, ‘전시납북자’라는 용어를 공식용어로 사용하기를 촉구

납북어부 부인 음독자살(8.28)

- 1972년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다 북한경비정에 납북된 어부(70, 오대양 62호)의 부인 유모(70)씨 음독자살함.
 - 2007년 10월 통일부와 적십자사로부터 납북어부가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고 비관

북한, 납북단체 미 의회 결의안 추진관련 ‘남한 당국 책임’ 주장(9.2)

-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등 국내인권단체들이 미 의회 ‘납북자 결의안’ 상정 추진과 관련하여 북한은 남한 당국의 책임론 주장.
 - 북한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통전부 소속 조평통 운영)는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라는 우익보수단체가 납북자 명단을 날조, 미국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부추기려 하고 있으며, 불순한 반공화국 소동을 목인”하는 남한 당국의 태도 지적
 - 북한 민화협 대변인도 “남조선 당국은 우리를 반대하는 부질없는 망동이 날로 심해지는데 책임을 져야하며 북남관계에 미칠 엄청난 후과를 명심하고 불순한 모략책동을 당장 중지시켜야” 할 것으로 주장

납북자 이름 부르기 캠페인(9.2)

- 납북가족단체 회원들이 10월 초 예정 남북정상회담에서 납북자문제를 의제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며, 파주 임진각 망배단과 미국 백악관 앞에서 납북자 1,214명 이름 부르기 캠페인 실시함.
 - 납북인사들의 명단과 성명서가 담긴 풍선을 북측으로 날리는 행사
 - 미국 행사는 일본계 미국인 기획, 재미교포 참여
 - 북한의 우리민족끼리는 납북자단체에 대해 ‘민족을 등진 인간 쓰레기’로 비하, 미 의회 결의안 추진관련 “공화국에 대한 엄청난 정치적 도발이며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고취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음모책동”, “극우반통일세력의 반말마적 몸부림을 치고 있다” 주장

송환 국군포로 국가유공자 인정소송 패소(9.5)

-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귀환 국군포로가 “북한 아오지 탄광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부상했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함.
 - “국가유공자가 되려면 전투 또는 관련된 일을 하다가 다쳐야” 하지만, 원고의 부상은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돼 북한공민으로 편입된 상태에서 탄광근무중 발생하였기 때문에 인정되지 못함.

납북 어부 이한섭 귀환(9.13)

- 1975년 동해상 조업중 납북된 어부 이한섭(59, 천왕호)이 6월 탈북, 선양 영사관에 머물다 국내 입국.
 - 천왕호 선원 33명중 2005년 귀환 고명섭, 2007년 귀환 최옥일에 이어 3번째 귀환, 한국에 노모와 누나 1명, 동생 6명 거주
 - 탈북과정에서 정부가 탈북 브로커에게 대가를 직접지불했다고 납북자가족 모임 대표가 주장하였으나, 통일부는 부인

국방부 탈북 국군포로 가족 DNA 검사(9.16)

- 국방부가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사망한 국군포로의 탈북가족에 대한 보상지원을 위해 DNA 검사 실시, 군 수사기관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7월부터 검사 지원.
 -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당 5천만원 보상금수령을 위해서는 본인이 국군포로 탈북 가족임을 입증해야 함.
 - 탈북가족 DNA는 국군포로의 남한 거주 가족 DNA검사와 비교, 가족여부 판단
 - 총 36가족 142명이 DNA 검사 신청을 했으며, 19가족 50명이 국군포로 가족으로 입증

월북처리 군무원 납북자 인정(9.21)

- 월북으로 처리되었던 군무원 아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아버지가 본인의 사에 반해서 월북했다고 민원을 제기, 통일부가 국방부에 조사를 요청하여 군 검찰 수사기록 검토에 따라 월북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 납북자로 인정됨.
 - 조병욱(7급 군무원, 당시 37세)1977년 10월 21일 경남 진해시 육군 제3정비창에서 정비반장으로 일하다 2인승 경비행기를 타고 조종사와 함께 월북한 것으로 처리되었음.
 - 월북자로 분류되었다가 납북자로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로, 유사한 구제신청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납북어부 간첩조작 의혹사건 재심 권고(9.28)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1985년 전북군산에서 발생한 ‘정삼근 간첩조작 의혹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국가차원의 사과와 재심을 권고함.
 - 정삼근은 1969년 조업중 납북, 11월 귀환, 수산업법 및 반공법 위반으로 처벌
 - 1985년 5월 전주보안대는 불법연행후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 까지, 52일 동안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 불법감금, 구타 등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 간첩으로 조작한 사실을 밝힘.
 - “민간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는 보안대의 수사는 엄연한 불법”이며,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해 중형을 선고한 법원 역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공익기관으로서 직무를 저버렸다(전주지법 군산지원과 광주고등법원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자백 주장에도 불구하고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대법원 형 확정)”고 지적

납북가족 해상시위(9.28)

- 납북자가족모임과 피랍탈북인권연대 회원 10여명은 경기도 시흥 월곶항에서 ‘납북정상회담에서 납북가족의 생사확인 및 송환협의’를 주장하며 선상집회를 벌임.
 - 납북자의 93%가 납북어부라는 점에서 해상시위
 - 납북어부 부인 유우봉 추모제

정상회담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촉구(10.1~2)

- 6.25전쟁국군포로가족협의회와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효자동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상회담에서 문제해결을 촉구함(10.1).
 - 납북자가족모임은 청와대를 방문 문제해결 요청 및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호소문 전달 예정
 - 6.25전쟁국군포로가족협의회,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납북자가족모임, 피랍탈북인권연대는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촉구 촛불시위(10.2)

납북자·국군포로단체 정상회담 비판 시위(10.4)

- 납북자가족모임,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6.25전쟁국군포로가족협의회, 뉴라이트북한인권특별위원회, 피랍탈북인권연대 등 관련단체들은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납북자 국군포로 즉각 송환을 외면한 양국 정상은 민족 앞에 사죄하고, 거짓평화 합의문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함.
 - 양국 정상이 가족을 잃은 슬픔과 연좌제 등 고통과 핍박 속에 살며 가슴에 맺힌 한을 풀 수 있도록 납북자·국군포로 생사확인 및 즉각송환 합의 도출을 기대했으나, 가족들 낙담 항의
 - 국군포로 송환 및 납북자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단식농성(10.5)

귀환납북자들,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에 개인통보 제출(10.15)

- 귀환한 납북자인 이재근(2000년), 진정팔(2002년), 김병도(2003년), 고명섭(2005년), 최목일(2007년)과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는 북한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개인 통보를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에 제출함.
 - 북한이 국제규약 1조(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 7조(어느 나라든 임의로 떠날 수 있는 권리), 9조(자기의 나라에 귀국할 수 있는 권리), 12조(가족의 화합을 지킬 권리), 18조(사상의 자유를 지킬 권리), 23조(강제적 노동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
 - 귀환자들은 개인별로 납치 당시 상황과 강제역류 과정, 강제노동 내용, 탈출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여 소장에 첨부

납북피해보상심의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0.16)

- 국무회의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함.
 - 가족피해위로금으로 월최저금액에 납북기간을 곱한 기본금 지급
 - 만 65세 이상 10% 가산금
 - 귀환 납북자의 경우에는 정착금 지원

통일부-납북자가족, 쌍방고소건 취하(10.22)

- 통일부와 납북자가족모임이 상호 고소건을 취하하고, 통일부장관 집 앞에서 벌인 촛불시위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에 유감표명.

납북자가족모임 ‘보상법 시행령’ 거부결정(10.29)

- 납북자가족모임 소속 회원 60여명은 총회에서 ‘납북피해자 보상법 시행령’ 전면 거부를 결정함.
 - 납북자지원법에 ‘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으나, 이에 대한 진전을 이뤄내지 못한 상황에서 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시행령과 위로금 규모를 결정
 - 피해위로금도 신청하지 않기로 함.

납북피해자 지원단 설치(11.5)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상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할 ‘납북피해자 지원단’이 설치되어 정식업무를 시작함.
 - 행자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파견인원을 포함 11명으로 운영될 예정
 -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것임.

납북 유풍호 선원 사진 공개(12.2)

- 납북자가족모임은 1972년 납북되었던 유풍호 선원 5명이 납북 5개월 뒤 (1972.11.9) 북한 모처에서 찍은 사진 등 사진 2점과 편지 2통을 입수해 공개함.
 - 사진에는 유풍호 선원 남정렬(당시 39세), 선장(당시 49세) 등 5명은 김일성배지를 추정되는 배지를 단 양복 착용
 - 사진 뒤에는 ‘1972.11.9 사회주의어로 진출하는 기념사진’이란 글과 ‘남정렬, 배민호, 리수석, 리원제, 김吉正’이 쓰여 있음.
 - 2001년 이후로 추정되는 남정렬의 사진과 편지도 공개됨.

국방부 국군포로 소련이송 증거 미발견(12.18)

- 국방부는 한국전쟁 당시 국군포로들이 소련으로 이송되어 강제노역 등을 당했다는 미 국방부 문서내용과 관련 이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함.
 - 미 국방부 문서 작성자를 비롯 국군포로 소련이송을 주장한 옛 소련 장성 강상호의 아들, 카자흐스탄 거주 한국전 참전 고려인 10여명, 귀환 국군포로, 러시아 체류 탈북자 100여명의 증언, 러시아 군사사연구소 방문 등을 통해 확인했으나 포로이송을 확인할 증거를 찾지 못함.

3. 이산가족

제6차 이산가족 화상상봉 실시(8.13~14)

- 8.15계기로 남측 9개 도시 13개 상봉실과 평양 고려호텔 10개 상봉실에서 하루 4차례 가족 대 가족 상봉방식으로 화상상봉을 추진함.
 - 각 40가족씩 화상상봉 가족명단 교환, 화상단말기 연결과 운용시험 실시 및 화상상봉 전용망 이용 가족사진 교환 합의(8.1)
 - 상봉가족 명단확정(8.7)
 - 전체 80가족 563명이 화상상봉

제16차 이산가족 대면상봉 실시 합의(8.17)

- 대한적십자사는 10월 1일부터 6일까지 금강산에서 각 100명씩 상봉을 실시하기로 합의함.
 - 각 200명 씩 상봉후보에 대한 생사확인 의뢰서 교환(8.22)
 - 생사확인 결과 교환(9.13), 최종명단 확정(9.18)
 - 제16차 대면상봉이후 제7차 화상상봉 구체일정 협의에 합의

목적, 제16차 이산가족 대면상봉 연기 제안(9.13)

- 조선적십자회는 제16차 이산가족 대면상봉이 정상회담기간(10.2~4)과 겹치기 때문에 10월 17일~22일로 연기하자고 제안함.

- 기존 합의 일정에 따라, 남측은 북측이 의뢰한 200명중 166명의 재남 가족 생사를, 북측은 남측이 의뢰한 200명중 135명의 재북가족 생사를 확인 통보

정상선언, 이산가족 상봉 상시화 합의(10.4)

- 남북정상은 정상선언 제7항에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 면회소가 완공되는 데 따라 쌍방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명시함.

제16차 이산가족 대면 상봉 실시(10.17~22)

- 금강산에서 북측가족 97명이 재남가족 400명을, 남측가족 94명이 재북가족 250명을 순차상봉함.
 - 남북자와 국군포로 20명에 대해 생사확인을 요청했으나, 19명은 확인불능, 1명은 사망통보로 상봉에 미포함

제7차 이산가족 화상상봉 실시(11.14~15)

- 대한적십자사 본사 5개 상봉장과 인천, 대구, 부산, 대전, 수원, 광주, 춘천, 제주 등 8개 지사에 설치된 상봉장과 북측에서는 평양의 10개 상봉실에서 실시되며, 남북 각 39가족씩, 총 78가족이 상봉함.
 - 원래 각 40가족이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남북에서 각 1가족이 상봉 포기

총리회담 이산가족 영상편지 시범교환 합의(11.16)

- 남북한당국은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2008년 이산가족 영상편지 시범교환, 금강산 면회소 사무실 준공식(2007.12.7) 공동 진행에 합의함.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11.28~30)

-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이 금강산에서 개최되어 이산가족 상봉확대, 이산가족

상시상봉, 국군포로·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문제, 남북대표 금강산면회소 상주, 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됨.

- 남측이 이산가족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마다 수시로 만나도록 하자는 ‘상시 상봉’을 제안했으나, 북측은 상봉확대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로 어렵다는 입장 표명
- 남북 20가족씩 영상편지 시범교환 후 분기별 화상상봉(각 40가족씩)과 영상편지 교환(각 30가족씩)에 합의
- 영상편지교환사업관련 북측에 3억 1,700만원 상당의 촬영·편집장비 일체, 차량 지원과 별도로 1건당 1,000달러 지원 합의
- 6.15 공동선언 8주년기념 금강산 특별 대면상봉(기화상 상봉자중 100명씩 선정, 거동불편자 가족 1명 동반)으로 재상봉 기회 합의
- 매년 400명 대면상봉 합의
- 2008년 3월 이산가족면회소 준공이후 제10차 적십자회담 개최합의

4. 기타

독일인 이산가족 레나테 흥 한국 방문(8.22)

- 레나테 흥은 서울 남산 대한적십자사의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방문(8.22).
 - 동독 유학생 남편 상봉을 도와달라고 남북한 정상에게 호소문 발표(8.23)

남북 태국여성 귀국지원 촉구(9.17~18)

- 태국에서 열린 ‘북한인권 국제회의’에서 월북 주한미군 젠킨스(일본인 납치자와 결혼)는 마카오에서 납북된 태국여성(아노차 판조이, 1978년 5월 21일, 당시 24세)의 귀국을 국제사회가 지원할 것을 호소함.
 - 젠킨스는 2005년 발간 수기 ‘고백’에서 아노차가 월북 미군 병사와 결혼했다고 주장
 - 태국정부는 아노차의 귀향지원을 중국에 요청, 아세안회의 막후에서 태국 외무장관은 북한외무상과 회담을 갖고 아노차를 찾는데 양국이 협력하기로 합의

장기수 2차 송환 촉구 시위(9.28)

- 대전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대전충남 양심수후원회,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대전충남통일연대)이 장기수 2차 송환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함.
 - 이창근(77, 1969 출소)은 “2001년 당시 국내실정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 송환대상에서 누락”되었다며, 정상회담에서 추가송환이 이루어지기를 희망
 - 허찬영(78, 1965 출소)은 “송환을 원하지만, 남쪽에 있는 가족들과의 자유로운 만남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
 - 대전충남지역 5명의 장기수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민범식(87), 최일현(77) 등 4명이 송환 희망

미국상원 군사위, 한인 이산가족 보고서 제출 요구(10.1)

-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2008년 회계연도 국방예산 관련법안을 처리하면서 대통령에게 향후 6개월 안에 북한에 이산가족을 가진 한국계 미국인의 숫자와 이산가족 상봉실태 등에 대해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통과시킴.
 - 북한에 친척이 있는 미국인 수와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수
 -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미국인 수
 - 2007년 한국계 미국인이 북한에 송금한 액수
 - 이산가족 상봉 관련 사기사건 수

5. 분석 및 평가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 개선 촉구 국제연대 지속

- 중국 등 해외체류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및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 및 개선촉구 활동이 국제연대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교회를 중심으로 해외 한인교포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음.
 - 탈북자들의 경유국인 태국 등 동남아국가에 대한 탈북자 인권보호 요구도 가시화

탈북자 북한밀입국 관련사건 증가

- 국내입국 탈북자가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북한으로 밀입국, 재탈북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불법적인 거래들을 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국내 정착과정에서 어려움으로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북한으로 밀입국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현실을 입증하고 있음.

탈북자 해외난민신청 급증

- 탈북자들이 미국, 일본이외에도 영국, 벨기에, 독일, 스웨덴 등 유럽지역으로 이동하여 난민신청을 하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상당수가 조선족 혹은 한국국적을 취득한 탈북자가 신분을 위장하는 것으로 추정

탈북여성 출산 자녀 현실적 보호방안 모색 가시화

- 미확인 보도이기는 하나, 중국 일부지역 지방정부가 탈북여성과 중국 남성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현실적인 보호방안으로 호구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납북자 가족 피해보상법률 제정

- 전후 납북자 가족 및 귀환당사자에 대한 피해보상 법률 및 시행령이 제정되고, 납북피해보상심의위원회 및 납북피해지원단이 구성됨.
 -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납북자가족단체와 정부 간의 갈등이 가시화

납북자 및 국군포로문제 당국 간 합의 미흡

- 제2차 정상회담에서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기대되었으나, 우리 측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전을 이루어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이산가족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에 그침
 - 납북자가족단체들의 불만이 더욱 고조됨.

이산가족 상봉규모 확대 및 영상편지 교환 합의

- 이산가족면회소 준공을 계기로 상시상봉을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 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상봉 규모를 소규모로 확대하고, 영상편지 교환 및 화상상봉의 확대에 합의함.
 -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을 위한 북측에 대한 장비 및 비용지급이외에도 영상편지 1건당 별도의 재정지원 방식으로 북측의 협력을 유도하고자 함.



제2권 2호 2007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NORTH KOREAN HUMAN RIGHTS